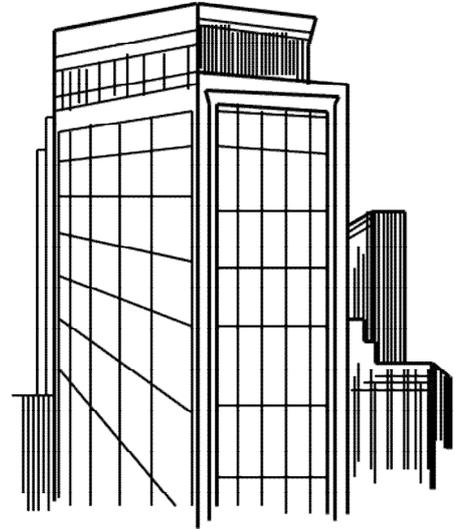


경영정보 브리핑

2021. 10. 1. (금)



정책이슈

국토교통부 적정 공기 산정 시스템 구축	P. 1
건설산업계, 금리 인상으로 인한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P. 3
하도급대금 미지급 신고로 198개 업체 218억 회수 성과	P. 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P. 5

조합·유관기관 등 동향

전기공사공제조합, 공제계약 만료일 안내 서비스 구축	P. 7
보증 심사량 증가, 디지털 전환으로 돌파구 찾는 전문건설공제조합	P. 8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수소융합얼라이언스·KB국민은행과 업무제휴 체결	P. 8
전기안전위원회 첫걸음, 설비 검사·점검기준 논의 시작	P. 9
전기요금 8년 만에 인상, 4인 기준 월1,000원 오를 전망	P. 9

금융

월간 경제지표	P. 10
美 FOMC 회의 : 테이퍼링 연내 시작	P. 11
한국은행 금융안정상황 보고서 : 불어난 '위험한 대출'	P. 11
국제 유가 상승세 유지 전망	P. 12
中 헝다그룹의 위기	P. 12

정 책 이 슈

▣ 국토교통부 적정 공기 산정 시스템 구축

1. 공공공사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 시스템' 9월 17일부터 본격가동

-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제정·고시하고, 17일 본격적으로 시행. 금번 공기 산정기준은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성,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규모, 특성,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발주자가 적정공기를 산정하도록 하고,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정공기를 조정하도록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
- '적정 공사기간 산정 시스템' 도입에 따라 공기 산정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공기 연장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공사 규모에 따라 공기 적정성 심의 진행

- 우선 제정안은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시·군·구의 경우 50억원 이상**에 대해선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공기 적정성 심의를 받도록 함.
- 공기 산정공식은 기존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함.

구 분	내 용
비작업일수	◦ 기존에는 최근 10년 동안의 기상정보를 적용하도록 했으나 이를 최근 5년 또는 10년으로 변경
작업일수	◦ 주공정(Critical Path)을 구성하는 작업량 기준으로 산출하거나 과거의 실적자료·경험치, 동종시설 사례 등을 활용하고, 현장여건 및 공사규모, 지질조건, 기상·기후조건 등에 따라 조정하도록 함.
기타	◦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준수를 원칙으로 하되, 연속작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교대근무 및 주·야간 공사로 구분해 산출하도록 함. ◦ 공기 적정성 검토 단계에서 실적 공기는 최근 5년간 준공된 동종 또는 유사 공사의 실제 공기 평균값을 활용하고, 여기에는 준비기간과 정리기간을 합산하도록 규정.

3. 경우에 따라 협의 하에 발주청과 시공자가 계약기간 연장 결정

-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공자가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하면 발주청과 시공자가 **협의 해 공사기간 조정을 결정.**

◦ 시공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 설계변경(시공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준공기한 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발주청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기가 연장된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 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

- 당초에는 상호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자문을 거쳐 **발주청이 결정하도록 했는데 이를 발주청과 시공자가 협의·조정하도록 완화.**
(e대한경제, 9. 13.(월))

■ 건설산업계, 금리 인상으로 인한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1. 세계 주요 국가가 긴축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추세

-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지난 1년 반 동안 각국 정부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통해 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 작년 말 부터는 긴축재정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중.
- 한국 역시 지난 8월 가계부채 및 자산시장의 불안정성 억제를 위해 2년 9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바 있음.

2. 저금리와 막대한 시중 유동성은 최근까지 건설경기를 지탱해 온 주요인

- 2020년 한해 총 공사수주액은 194.1조원으로 역대 최고금액을 기록. 이는 2010년 수주액인 103.2조원에 비해 약 두 배에 달하는 수치. 세부적으로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수주가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지속되고 있는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이 주택을 포함한 자산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동하는 중. 특히 우리나라는 서울을 중심으로 장기간 지속되어 온 아파트 공급 규제와 최근 강화된 부동산 거래규제가 저금리 및 과잉유동성과 맞물리면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수요자들의 기대를 강화시켜 수도권 주택가격이 폭등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구 분	합계액(A+B)	토목(A)	건축(B=a+b)	주거용(a)	비주거용(b)
2010년 (A, 조원)	103.2	41.4	61.8	31.6	30.2
2020년 (B, 조원)	194.1	44.7	149.4	92.8	56.6
증가배수(B/A, 배)	1.9	1.1	2.4	2.9	1.9

3. 국내 건설경기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함.

- 이미 금리 수준이 지나치게 낮은 상태에서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조달 부담의 증가 정도가 크지 않고 각국이 긴축적 통화정책과 상충되는 대규모 재정 패키지를 발표하는 등 정책적 일관성이 결여된 상태. 따라서 각 국의 긴축정책이 국내 건설 경기에 미칠 영향은 단기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글로벌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므로 이에 따른 **금융비용과 분양 리스크 증가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제 823호, 9. 13.(월))

▣ 하도급대금 미지급 신고로 198개 업체 218억 회수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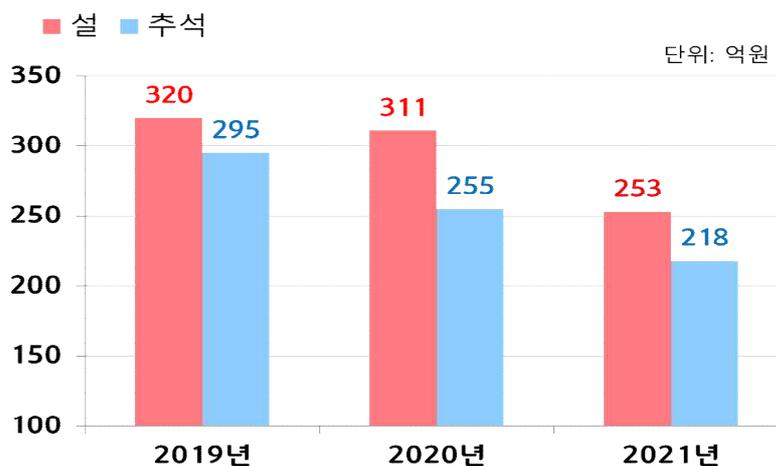
1. 공정거래위원회 추석 명절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중소기업이 받지 못한 하도급대금 218억원을 받아냈다고 24일 발표.
- 공정위는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전국 10곳에 신고센터를 설치. 건설 하도급 업체뿐 아니라 자동차 부품 납품업체 등 수백 곳의 중소기업의 신고도 접수됨.

2. 코로나19에 자진 시정은 감소

-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신고는 대부분 오랜 기간 참다가 진행되는 특징을 보임. 원사업자와의 관계가 신고로 인해 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 공정위는 이렇게 접수한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정을 거쳐 자진 시정을 유도함.
-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지급된 하도급 대금 액수는 최근 3년 중 올해 추석이 가장 적었음. 2019년 설과 추석엔 각각 320억원과 295억원에 달하는 하도급 대금이 신고 이후 자진 시정을 거쳐 지급됨. 지난해엔 311억(설), 255억원(추석)이었으나 올해 설은 253억원, 추석은 218억원으로 줄어든 것.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실적



3. 조기 지급 협조는 1조원 증가

- 공정위는 추석 전에 예정된 대금이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주요 기업들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음. 그 결과 121개 업체가 약 2만 9,650개 하청업체에 3조 3,789억원을 조기 지급. 지난해 추석 전 조기 지급된 총액이 2조 896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1조원 이상 늘어난 규모. (중앙일보, 9. 24.(금))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시행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구체적 내용 등이 담겨있는 것.
-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내용이 불확실해 모호하다”는 불만이, 노동계에서는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한다”는 비판이 발생.

2. 시행령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 중독과 급성 중독에 준하는 질병 등 24가지로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적 인자란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 상태의 물질류, 허가 대상 유해물질, 금속가공유 등 총 199종의 유해인자와 인 등 금지 물질을 의미. ◦ 급성 중독에 준하는 질병은 인과관계의 명확성(급성)과 사업주의 예방 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산정.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이용시설범위는 △연면적 2000㎡ 이상 지하도상가 △연장 500m 이상 방파제 △바닥면적 1000㎡ 이상 영업장 △바닥면적 2000㎡ 이상 주유소·충전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구체적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와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데 따른 것.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해야 함. ▷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 시공능력 상위 200위 내 건설사업자는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해야 함. ▷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련 인력과 시설, 장비를 구비하고 유해·위험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해야 함. ▷ 안전·보건 관리자와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하고, 재해 발생 등에 대비해 작업 중지 등 대응 조치와 피해자 구호 조치 등이 담긴 매뉴얼을 마련해야 함.

3. 중대산업재해 발생할 경우 안전·보건교육 이수필수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해야함.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차 1,000만원, 2차 3,000만원, 3차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중대산업재해로 범죄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은 사업장 명칭과 재해 발생 일시·장소, 피해자 수, 재해 내용과 원인,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5년 내 발생한 재해 여부를 공표하도록 하였음.
-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업 등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을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이라고 설명. (조선비즈, 9. 28.(화))

조합 · 유관기관 등 동향

▣ 전기공사공제조합, 공제계약 만료일 안내 서비스 구축

- 전기공사공제조합이 공제상품에 가입한 조합원에게 **계약 만료일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구축. 이는 1년 단위로 갱신해야 하는 연간계약과 공사중지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구간계약의 만료일을 안내함으로써 조합원이 **무보험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
- 계약 만료일 14일 전 공문 및 문자 메시지 발송, 유선전화 등으로 계약종료일이 임박한 사실을 알린 뒤 계약 연장 의사를 확인. 실제로 해당 서비스 구축 이후 최근 조합원에게 기일을 안내하여 계약변경을 유도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한 사례가 있음.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했을 1억원 상당의 피해사고를 안전하게 보험으로 처리하여 손해를 최소화하는 효과를 거둠.
- 한편 조합은 최근 공제 신상품을 잇달아 출시하며 조합원 서비스 강화에 힘쓰는 중. 9월 초 산업재해 위험에 직면한 조합원에게 법률자문, 산재처리, 손해사정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대재해업무지원 서비스'**를 개시한 데 이어 공사 종료 후 완성작업물로 인한 제3자 손해를 보상하는 **'영업배상책임공제 완성작업위험 특약 서비스'**를 출시한 것. 특약은 시중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공사 종료 후 정전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사고도 보장함으로써 조합원 맞춤형으로 설계됨.
- 조합은 향후에도 다양한 공제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조합원의 안전한 공사수행을** 지원할 계획.

<전기공사공제조합 신규 공제 관련 서비스>

구 분	내 용
계약만료일 안내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 만료일 14일 전 공문 및 문자 메시지 발송, 유선전화 ◦ 계약종료일 임박 고지 및 공제 계약 연장의사 확인
중대재해업무지원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 위험에 직면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법률자문, 산재처리, 손해사정' 등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
영업배상책임공제 완성작업위험 특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성작업물로 인한 제3자 손해를 보상 ◦ 시중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공사 종료 후 정전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사고도 보장함으로써 조합원 맞춤형으로 설계

■ 보증 심사량 증가, 디지털 전환으로 돌파구 찾는 전문건설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 보증 실적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이와 관련한 보증 심사 업무량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 2014년부터 우상향 곡선을 나타내고 있는 조합 보증실적은 지난해 87만 건을 제공하며 14년 실적 56만 건 대비 약 1.5배 증가.
- 올해 들어서도 조합 보증 실적은 2%대 성장세를 이어가는 중. 지속적인 보증수수료 인하를 통해 상품 경쟁력을 갖춘 것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건설업등록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조합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도 실적 증가세의 중요요인으로 보임. 2014년 연말 기준 4만 5,000개사였던 조합원은 2021년 현재 5만 7,000여개사로, 7년여 만에 **1만 2,000개사 넘게 증가**. 실제로 **보증 실적 증가세는 조합원 수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
- 조합은 앞으로도 조합원 수 증가에 따른 업무량 증가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직 시스템 효율화'를 중점 혁신 과제로 선정해 추진 중. 조직개편 TF팀을 구성해 내년 2월을 목표로 일부 지점을 통합하는 작업을 완료하고, 기존 지점 인력을 스마트심사팀으로 집중시켜 인터넷 업무처리 전담 조직으로 운영해나갈 계획.
(대한전문건설신문, 9. 17.(금))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수소융합얼라이언스 · KB국민은행과 업무제휴 체결

-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수소경제 발전 및 육성을 주요 골자로 **수소융합얼라이언스 · KB국민은행과 전략적 업무제휴**를 체결했다고 16일 발표.
- 3사는 이번 업무제휴를 바탕으로 수소 전문기업 육성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수소 산업 생태계 구축에 필요로 하는 신상품 개발 등에 상호 협력하겠다는 계획. 아울러 수소 경제 발전 및 육성에 힘을 합칠 방침. (e대한경제, 9. 24.(금))

■ 전기안전위원회 첫걸음, 설비 검사·점검기준 논의 시작

- 전기설비 검사와 점검업무 기준을 새로 만들기 위한 전기 분야 관련 전문가들의 첫 모임인 전기안전위원회가 발족. 17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지난 16일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전기 분야 산·학·연 전문가와 정부, 유관기관, 협·단체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전기안전위원회 1차 회의가 개최됨.
- 전기안전위원회는 현행 규정(전기설비기술기준)과 전기설비 검사·점검업무 현장 간의 차이를 해소하고 기술 변화상황에 맞는 새 기준 마련을 위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전하는 역할을 수행. 지난 4월 전기안전관리법이 본격 발효되면서 관련법과 정부 고시에 따라 운영될 예정.
- 위원들은 오는 11월까지 전기수용설비와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검사기준을 제정·공고하고 내년 초까지 전력계통설비 검사기준을 새롭게 제정하기로 함. 아울러 검사기준을 안전관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책자 1만부를 만들어 대학과 공공도서관, 전기 유관단체에 보급하고 현장 기술자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 (이데일리, 9. 17.(금))

■ 전기요금 8년 만에 인상, 4인 기준 월1,000원 오를 전망

- 정부와 한국전력이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4분기 전기요금을 전격 인상.** 정부와 한전은 4분기(10 ~ 12월)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0.0원으로 책정했다고 23일 발표. 이는 전분기 (-3원)보다 3원 오른 것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
-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 요금은 매달 약 1,050원 오를 전망. 2·3분기에는 1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요금을 동결한 바 있으나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유류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 가격 급등에 따라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
- 이 같은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한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10.8원.** 13.8원 올라야 하는 것이 맞지만 전기요금 인상 폭은 3원에 그친 것. 이는 분기별 요금을 최대 kWh당 5원 범위 내에서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만 변동할 수 있도록 상한 장치를 뒀기 때문. 다만, 대표적인 공공요금인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도시가스 등 다른 공공요금을 비롯한 전반적인 물가 상승 압박이 커질 전망. (중앙일보, 9. 23.(목))

금 용

▣ 월간 경제지표

기간 : 2021. 9. 1. ~ 2021. 9. 30.

구 분	변 동 폭	9. 1 기준가	9. 29 기준가
KOSPI	▼ 152.25	3207.02	3054.77
KOSDAQ	▼ 50.86	1045.98	995.12
S&P500	▼ 164.63	4524.09	4359.46
CD(91일, %)	▲ 0.26	0.92	1.18
국고채(3년,%)	▲ 0.186	1.417	1.603
회사채(3년, AA-, %)	▲ 0.209	1.848	2.057
국고채(10년, %)	▲ 0.281	1.942	2.223
미국고채(10년, %)	▲ 0.24	1.299	1.539

□ 증시

- [국내] 여전히 강한 코로나19 확산세와 FOMC 결과 및 헝다그룹 이슈는 증시하락 요인이나, 저가매수세 유입이 하방을 지지하는 모습임.
- [미국] 생산자물가 상승 부담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와 실업 지표 부진, 미국 섯다운 우려 등으로 최근 하락세를 나타냄.

□ 금리

- [국내] 강한 인플레이션 압력과 한은의 연내 기준금리 상승 전망, 미국 테이퍼링 가시화로 인한 달러화 유출 우려로 국채금리가 급등하였음.
- [미국] FOMC 이후 테이퍼링 움직임의 반영과 유럽과 중국의 전력난 지속이 글로벌 에너지 가격에 상방 압력을 주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발생함에 따라 미국채 금리는 급등하고 있음.

■ 美 FOMC 회의 : 테이퍼링 연내 시작

- 9월 FOMC에서 파월 연준 의장은 ①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과거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고, ② 경제 회복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③ '괜찮은(decent)' 고용 회복세가 이어지는 경우 11월 테이퍼링 시작이 가능하다고 밝힘.
또한, 내년 중반까지 테이퍼링 종료를 예상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연말부터 평균적으로 월간 150억달러 규모의 비교적 빠른 속도로 테이퍼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 기준금리는 만장일치로 동결하였으나, 내년 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둠.
테이퍼링이 종료된 이후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내년 하반기 중 한 차례 금리 인상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됨.
-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에 비해 하향(7.0%→5.9%) 하였으며 실업률 전망은 상향(4.5%→4.8%),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상향(3.4%→4.2%) 조정함. 중국의 헝다 문제는 미국에 영향은 미칠 수 있지만, 리스크가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언급함.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증권, 하나금융투자 9. 23.(목))

■ 한국은행 금융안정상황 보고서 : 불어난 '위험한 대출'

-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자영업자, 소득이 비교적 낮은 2030세대 등에서 상황이 어려운 '위험한 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자영업자 대출은 사회적 거리두기 피해가 컸던 도소매업, 여가서비스업 등의 대출 증가율이 높았으며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2금융권에서 증가함. 2030 청년들의 대출은 전세자금 등 주택과 관련한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며 소득이 낮은 편이어서 저소득 차주 비중이 크게 나타남.
- 한은은 가계 부채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택 가격의 높은 상승이 이어지며 잔재 취약성이 높아졌으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채무상환부담, 금융기관의 복원력 변화 등을 살펴보았을 때 여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함.
(매일경제 9. 24.(금), 조선일보 9. 25.(토))

■ 국제 유가 상승세 유지 전망

- 국제 유가가 수요증가와 공급차질로 수개월 간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전력 생산 등에 필요한 원료를 석유로 대체하는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겨울 기간 동안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유럽의 미국 여행이 허용되는 11월부터 항공 연료 수요 증가가 예상됨. 공급측면에서는 허리케인의 8월 말 멕시코만 강타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러시아의 생산 정체 및 사우디의 증산 한계 등으로 인하여 공급의 장애요인이 발생함. (블룸버그 9. 27.(월))
- 한국은행은 원유의 수급불균형이 커지고 있으며 투기자급 유입도 유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하반기에 배럴당 70달러 안팎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다가 내년이 되어서야 유가가 완만하게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조선비즈 9. 26.(일))

■ 中 헝다그룹의 위기

- 중국 헝다그룹(China Evergrande Group, 中國恒大集團)은 중국 2위의 부동산 개발 회사로서 13년부터 높은 레버리지에 의존한 고속성장을 이루었으나, 중국정부의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한 부채규제로 인하여 파산위기에 몰림. 355조원 가량의 빚을 떠안은 채 유동성 위기에 빠진 헝다그룹은 23일로 예정된 달러 채권이자 약 990억원을 지급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며, 사실상 채무불이행 상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한국경제 9. 24.(금))
- 중국 지방정부는 투자자들이 주택매입을 위해 납입한 자금을 헝다그룹이 채무 상환 등에 전용하지 못하도록 주택매입 자금 전용 관리계좌를 개설하면서 헝다그룹의 회생보다 주택소유자를 우선하며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블룸버그 9. 27.(일))
- 단기적으로는 헝다그룹의 디폴트가 중국 금융시장 및 경기에 주는 부정적 충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리먼 사태와 달리 부동산 대출 관련 파생상품이 거의 없다는 점, 중국 내 투자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국내로의 파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한국경제 9. 26.(화))